

[서식 예] 보증채무금청구의 소(일반보증의 경우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보증채무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◇◇◇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금

10,000,000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를 지급보증인으로 하고 이자는 월 1%, 갚을 날짜는 2000. 0. 00.로 약정하였습니다.

2. 그런데 소외 ◆◆◆는 2000. 00. 0.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, 그 뒤의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는 소외 ◆◆◆ 및 피고에게 위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채무자인 소외 ◆◆◆와 피고 ◇◇◇는 서로 형제관계인데, 소외 ◆◆◆는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소외 ◆◆◆로부터는 위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.
3. 따라서 원고는 소외 ◆◆◆의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인 2000. 00. 0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|-----|
| 1. 갑 제1호증 | 차용증 |
| 1. 갑 제2호증 | 통고서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2통 |
| 1. 소장부분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00. 0. 0.

위 원고 000 (서명 또는 날인)

00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	
비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		
불복절차 및 기 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	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임(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649 판결). · 당사자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(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9807 판결). · 연대보증이 아닌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이 집행에 용이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고(최고의 항변권), 위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데(검색의 항변권, 민법 제437조 본문), 이러한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,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음(대법원 1968. 9. 24. 선고 68다1271 판결). 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